



외국의 정치 · 입법현황

2011. 8.

선 거 실
(법 제 과)

목 차

[요약]	1
1. 영국	4
2. 독일	6
3. 프랑스	8
4. 미국	10
5. 일본	15
6. 싱가포르	19

요약

1. 영국 : News of the World 전화해킹 사건

- 2007년 정치인 및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해킹으로 물의를 빚었던 영국의 주간지 『뉴스오브더월드(News of the World)』가 최근 더욱 광범위한 인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해킹을 한 것으로 드러나 폐간됨.
-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주간지의 편집장 출신인 앤디 쿨슨(Andy Coulson)을 총리실 공보특보로 임명한 데이빗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독일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정당법·연방의회의원법 개정논의

- 최근 실시된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기민당-기사당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33.8%로 유지되고 있음.
-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상한액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연방의회의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임.

3. 프랑스 : 하원의회, 출석률 저조한 의원들의 직무수당 삭감

- 프랑스에서는 하원의회에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의 직무수당을 삭감

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프랑스 하원의회 내규(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에 월 2회를 초과하여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의원의 월 직무수당의 25%를 삭감할 수 있고 전체표결의 3분의 1 이상 불참할 경우 직무수당의 3분의 1을, 전체표결의 2분의 1 이상 불참할 경우 직무수당의 3분의 2를 삭감할 수 있음.

4. 미국 : 위스컨신 주의 주민소환 추진 현황

- 위스컨신 주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스콧 워커(Scott Walker) 주지사가 공공기관 근로자 대부분의 단체협상권을 없애고,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민주당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9명의 상원의원들(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에 대한 주민소환선거가 추진중임.
- 스콧 워커 주지사는 아직 취임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선거는 8월 9일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소환 선거에서 공화당의원들의 소환이 성립되고,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다면 이는 민주당에 큰 정치적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5. 일본 : 수상 메니페스토 관련 사과, 민주·자민당 선거구개편안 제출

- 7월 31일 실시된 사이타마현 지사선거에서 현직인 요시다 키요시 지사가 재선에 성공함.

- 칸 나오토 수상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칸 수상과 민주당 간사장 등이 “메니페스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힘. 이에 대한 민주당 내부와 각료들은 찬반양론으로 분열된 상태임.
- 선거구별로 1표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표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자당은 각각 유권자 수가 적은 현을 통합하고 유권자 수가 많은 현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음.

6. 싱가포르 : 선거법 개정

- 가장 최근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은 2010년으로, 『국회의원총선거법 (Parliamentary Elections Acts)』 및 『대통령선거법(Presidential Elections Acts)』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2011년 총선거에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 적용되었음.
- 2010년 개정된 선거법은 그룹대표 선거구의 축소, 비선거구국회의원의 최대수 상향 조정, 선거일 전일 방송광고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운동 휴지기의 도입, 선거 관련 인터넷 광고 기준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영국 해외통신원 : 고영노

정치현황 : News of the World 전화해킹사건

- 지난 2007년 정계 및 연예계 유명인사들의 음성메세지를 해킹한 사건으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영국의 주간지 『뉴스오브더월드 (News of the World, NOW)』가 더욱 광범위한 인사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해킹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간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함.
 - 2007년 동 사건으로 편집위원인 클라이브 굿맨(Clive Goodman)과 사설 탐정 글렌 멀커(Glenn Mulcaire)가 각각 4개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
- 금번 조사에서 NOW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런던시장, 휴 그랜트(Hugh Grant), 시에나 밀러(Sienna Miller) 등 정계 및 연예계 인사는 물론 범죄 및 2005년 7.7테러 피해자 및 유족 등 4,000여명의 전화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였으며, 2011년 7월 10일을 끝으로 발간을 중단하였음.¹⁾
- 금번 사건으로 인해 클라이브 굿맨이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NOW의 편집장으로 있던 앤디 쿨슨(Andy Coulson)을 총리실 공보특별보 임명한 데이빗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NOW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소유한 미국 언론

1) <<http://www.bbc.co.uk/news/uk-11195407>> (2011.8.10 검색)

매체들의 해킹의혹이 불거지며 미국 정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옴.
 ○ 더불어 본 스캔들로 인해 루퍼트 머독의 영국 위성방송사인 BSkyB
 인수계획 또한 백지화 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특정인에 의한 언론 독점을
 막기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음.



독일 통신원 : 배정범

1. 주요 정치현안

○ 최근 실시된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

조사기관	Allensbach	Emnid	Forsa	Forsch'gr. Wahlen	GMS	Infratest dimap	연방의회 선거결과
일자	7월20일	7월24일	7월27일	7월15일	7월 22일	7월22일	2009년 9월27일
기민/기사당	34.0%	33%	33%	33%	32%	33%	33.8%
사민당	27.0%	27%	25%	29%	26%	27%	23%
녹색당	20.0%	22%	22%	22%	22%	23%	10.7%
자민당	5.5%	4%	3%	4%	5%	4%	14.6%
좌파연합	7.5%	9%	10%	7%	8%	8%	11.9%
기타	6.0%	5%	7%	5%	7%	5%	6.0%

출처: <http://www.wahlrecht.de/umfragen/index.htm>

2. 최근 입법동향

○ 정당법 개정 추진현황

- 독일에서는 현재 정당법 조항 중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 2002년 6월 28일에 개정된 현행 『정당법』 제18조제6항제1문에 따르면, 정당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1억 3300만 유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게 2011년에는 1억 4190만 유로로, 2012년에는 1억 5080만 유로로 상향조정하고, 2013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됨.²⁾

- 이 개정안은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등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통과된 상황은 아니지만 연방의회에서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당법 개정안과 더불어 『연방의회의원법』상의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 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동일한 법률개정안으로 함께 제출됨.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연방의회의원의 월 보수액을 2012년 1월부터 292유로(3.8%) 인상된 7,960유로로, 2013년 1월부터는 다시 292유로(3.7%) 인상된 8252유로로 상향조정하는 것임.³⁾
- 이 개정안 역시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등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현재 통과된 상황은 아니지만 연방의회에서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2)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62/1706291.pdf>> (2011.8.1 검색)
 3)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62/1706291.pdf>> (2011.8.1 검색)



프랑스 해외통신원 : 윤석준

프랑스 하원의회, 출석률 저조한 의원들의 직무수당 삭감

- 『프랑스 하원의회 내규(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에 따라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의 직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함.
- 이 내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월 2회를 초과하여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해당 한 달 직무수당 1,420.03유로(한화 약 210만원)의 25%인 355.01유로(한화 약 53만원)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원의회 내규 제42조). 또한, 국회 공식 전체 표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무단으로 불출석 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3분의 1인 4,260.09유로(한화 약 640만원)를 삭감하게 되어 있으며, 국회 공식 전체표결 가운데 2분의 1 이상 무단 불출석 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3분의 2인 8,520.18유로(한화 약 1,280만원)를 삭감하게 되어 있음(하원의회 내규 제159조).
- 이 내규에 따라 지난 회기(2010-2011)의 경우에, 하원의회 내규 제4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해 수당이 삭감된 하원의원은 총 102명이었으며 그 금액은 총 95,142.01유로(한화 약 1억 4,200만원)에 이르렀음. 반면, 하원의회 내규 제15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 공식 전체 표결 출석률이 저조해 수당이 삭감되어야 할 하원의원은 총 17명에

이르렀고 그 금액은 총 72,421.53유로(한화 약 1억 860만원)에 달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삭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출처]

프랑스 시민운동 단체 «시민들의 시선» 홈페이지

<http://www.regardscitoyens.org/etude-sur-la-presence-des-deputes-a-l-assemblee-nationale-en-2010-%E2%80%94-2011/>

«시민들의 시선»이 운영하는 프랑스 의정감시 홈페이지

<http://www.nosdeputes.fr/confiseurs/2011/>



미국

미국 해외통신원 : 박세민

위스컨신 주의 주민소환 추진현황

(1) 검토배경

- 현재 위스컨신 주에서는 공화당 출신 주지사의 노동조합 관련 정책에 반대해 민주당이 주민소환으로 대응함에 따라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전국적인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민소환을 통해 전면전을 치루고 있는 상황임.
- 공화당 출신 위스컨신 주지사 스콧 워커(Scott Walker)가 주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련법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간의 대립을 야기함.
 -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조원, 학생들, 티파티 지지자들은 여러 차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위를 벌였음.
 - 위스컨신 주에서의 이러한 격렬한 시위는 지난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라고 함.⁴⁾
- 이러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촉발한 계기와 현황, 향후 동향에 대해 검토 분석하고자 함.

4)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7/13/us-wisconsin-recall-idUSTRE76C0HM20110713>> (2011.7.17 검색)

(2) 주민소환 관련 동향

- 공화당 출신의 위스컨신 주지사 스콧 워커는 2010년 당선 직후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법(Wisconsin Union Law) 개정을 주도함.⁵⁾
 -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근로자 대부분의 단체협상권을 없애고, 공공기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⁶⁾
 - 이에 대해 스콧 워커 주지사는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공공기관 근로자의 보수와 협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 공화당은 이러한 법안이 수직상승하는 공공기관 근로자 복지비용을 줄이고 주정부의 예산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지함.⁷⁾
 - 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이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함.
- 2011년 6월 위스컨신 주 대법원은 이러한 소환절차를 촉발하게 한 동법의 효력을 인정함.⁸⁾
 - 1심에서 동법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위스컨신 주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동법의 효력을 인정함.
 - 이러한 위스컨신 주 대법원의 결정에는 2011년 4월 위스컨신 주

5)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7/13/us-wisconsin-recall-idUSTRE76C0HM20110713>> (2011.7.17 검색)

6) 통과된 관련법에 의하면 경찰과 소방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지출하도록 하였음.

7) <<http://politicalticker.blogs.cnn.com/2011/07/12/wisconsin-recall-elections-underway/>> (2011.7.17 검색)

8) <http://en.wikipedia.org/wiki/2011_Wisconsin_protests> (2011.7.17 검색)

대법관으로 공화당 출신인 데이비드 프로세서(David Prosser)가 당선됨에 따라 공화당이 위스컨신 주대법원에서 4:3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동법의 주역인 현 주지사가 소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위스컨신 주 소환 관련 법 때문임.
 - 위스컨신 주법은 최소 재임 1년이 지나야 소환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주지사는 이번 절차를 통해 소환될 수 없고, 올 가을 이후에나 소환이 가능함.⁹⁾
 - 현재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 상원의원은 2008년 당선된 인사들에 국한됨.

(3) 주 상원의원 소환 관련

- 위스컨신 주 상원의원 33명중 현재 9명(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을 대상으로 소환절차가 시작됨.¹⁰⁾
 -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측이 강력히 반발한 일이 발생했는데, 공화당 인사들이 고의로 소환선거를 늦추기 위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후보로 나섬으로써 민주당 프라이머리(the Democratic Primaries)를 열도록 한 것이 그 이유임.
 - 공화당 인사들의 민주당 프라이머리 출마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고도의 비열한 대책이라고 비난받고 있음.

9) <http://www.realclearpolitics.com/articles/2011/04/19/what_prossers_victory_means_for_the_wisconsin_recall_elections_109595.html> (2011.7.17 검색)

10) <<http://www.thedailybeast.com/articles/2011/07/13/wisconsin-senate-recalls-why-they-spell-trouble-for-democracy.html>> (2011.7.17 검색)

※ 참고로, 위스컨신 주의 오픈프라이머리 법(open-primary law)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프라이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있는 누구든지 당적과 상관없이 프라이머리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음.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도 공화당 후보가 되기 위해 공화당의 프라이머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 만약 공화당 인사들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프라이머리 없이 바로 소환선거를 시작할 수 있었음.
- 공화당 측은 민주당 프라이머리 개최로 인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현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들이 캠페인은 물론 선거자금 모금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 지난 7월 12일 6개 지구에서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진행되었으며, 소환 선거는 8월 9일 실시됨.¹¹⁾

- 민주당 프라이머리의 결과는 당연히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압승으로 일단락되었음.
-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출마한 공화당 인사들이 2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여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환선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¹²⁾
-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6명의 민주당후보들이¹³⁾ 8월 9일 현역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소환선거에서 맞붙었음.

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7/13/us-wisconsin-recall-idUSTRE76C0HM20110713>> (2011.7.17 검색)

12) <<http://www.thedailybeast.com/articles/2011/07/13/wisconsin-senate-recalls-why-they-spell-trouble-for-democracy.html>> (2011. 7.17 검색)

13) 프라이머리에서 선출된 6명의 민주당 후보는 낸시너스바움(Nancy Nusbaum), 샌디 파슈(Sandy Pasch), 셸리 무어(Shelly Moore), 프레드 클라크(Fred Clark), 제시카 킹(Jessica King), 제니퍼 쉐링(Jennifer Shilling) 등임.

- 이번 소환 선거에서 민주당은 2명의 현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을 소환시키고 그 자리에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들을 선출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주 상원의회의 과반수를 점하지는 못함.
- 앞으로 민주당이 스콧 워커 주지사에 대한 소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관찰이 요망됨.

(4) 주지사 소환 관련

○ 민주당 측에서는 2012년 공화당 출신 주지사인 스콧 워커를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임.

- 위스컨신 주 민주당 의장 마이크 테이트(Mike Tate)는 7월 12일 민주당이 프라이머리에서 큰 차이로 승리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자신감을 피력
- 마이크 테이트는 현 주지사가 소환되어야 할 이유는 무수히 많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소환선거가 치러지면 소환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며 스콧 워커 현 주지사가 2014년 주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호언



일본 해외통신원 : 구분규

1. 주요 정치현안

- 7월 31일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 실시
 - 임기만료에 따른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가 7월 14일 고시되어, 7월 31일 실시됨.
 - 3선을 목표로 하는 현직 무소속 후보 1명 및 신인 무소속 후보 2명, 총 3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3당 모두 현 지사를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여야의 지지를 받았음.
 - 현직인 요시다 키요시 지사가 다시 당선됨(투표율 24.89%).
- 칸나오토 수상에 자금관리단체를 둘러싼 현금문제가 정권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¹⁴⁾
 - 자민당은 국회에서 수상의 현금문제를 철저히 추궁할 계획임. 수상의 자금관리 단체인 ‘초지회’는 제일 한국인계 금융기관인 중앙상업은행(요코하마시)의 전 이사로부터 함께 104만엔의 현금을 수령하였다가 환불하였음. 제일 한국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은 외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이 문제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표면화되었음.
 - 또한, 일본인 납치사건의 용의자 친족이 관계하는 정치단체 ‘시민의 당’과

14) 요미우리신문. 2011년 7월 28일자 기사 “2개의 현금 수상에 불씨... 추궁에 발뺌” 참고

연대하고 있는 정치단체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시민의 모임’에 ‘초지회’측이 6,000만엔이 넘는 불투명한 정치현금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수상, 민주당 간사장 등의 매니페스토 사죄에 대한 여당 내 혼란¹⁵⁾
 - 7월 21일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오카다 간사장이 2009년 중의원 선거의 정권공약(매니페스토)에 대해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의 전망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 전망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밝힌 문서를 발표함으로써 공식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죄함.
 - 오카다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진재해 부흥에 필요한 예산 조치와 비교해서 매니페스토 정책이 보다 중요한지 말할 시점이다”라고 말해 정책실현에 우선순위를 정할 의향을 강조함. 8월 초까지 매니페스토 검증의 총괄 문서를 당내에서 정리할 생각도 밝힘.
 - 이에 자민당은 특례공채법안 협력의 전제로서 공약의 중심인 고도모수당(아동수당), 고교 무상화, 농가호별보상제도,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아무 효과도 없는 정책 4가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를 요구함.
 - 오카다 간사장의 사죄표명은 자민당의 오시마 다다모리 부총재와 협의한 후에 행해졌다고 여겨져 민주당 중견에서 “특례공채법안 성립을 위한 비책이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오카다 간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 간부들에게 사죄에 관한 문서 내용을 전달함.
 - 칸 수상도 7월 22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재원확보에 관해서 약간 전망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불충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15) 요미우리신문. 2011년 7월 22일자 기사 “「검토 불충분했다」 오카다씨, 매니페스토 사죄” 참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함으로써 매니페스토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함.

- 현재 각료나 민주당 내부는 찬반양론으로 분열된 상황임. 현 국가전략상과 관방장관 등은 매니페스토 작성시 재원확보 및 프로세스에 대해 검토가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죄에 동의함. 반면, 하토야마 전 총리 및 현 방위상 등은 사죄를 강력히 비난하거나 사죄에 따른 야당과의 협력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냄. 민주당 간부 중 일부는 “사죄는 수상의 퇴진을 위한 연출이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오자와 전 대표와 가까운 ‘일신회’ 소속 위원들은 항의서를 제출할 방침을 정하기도 함.

2. 최근 입법동향

○ 참의원의 “한 표의 격차(一票の格差)” 시정 관련 각 정당의 움직임¹⁶⁾

- 민주당은 7월 27일 참의원의 “한 표의 격차” 시정을 위해 유권자 수가 적은 2현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통합구를 중심으로 하는 참의원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하여 참의원 총회에서 승낙을 받음.
- 민주당 안은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의한 현행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는 선거구를 20곳 줄인 126개로,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도 20석 줄인 76석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행의 합계 242석에서 202석으로 삭감하는 안임.

16) 산케이신문. 2011년 7월 27일자 기사 “참의원선거제도 개혁 민주당은 「10현합구」안 정수는 242→202으로” 참고

- 통합구의 대상이 되는 곳은 (1)야마나시와 나가노 (2)이시카와와 후쿠이 (3)시마네와 토토리 (4)코치와 토쿠시마 (5)나가사키와 사가의 각 선거구임.
- 의석정수는 야마나시와 나가노가 4석, 그 외는 2석으로 설정함. 또한, 미야기, 후쿠시마, 니가타, 기후, 교토, 히로시마의 각 선거구의 정수를 4석에서 2석으로 삭감하는 반면, 카나가와는 정수를 6석에서 8석으로 늘리는 개혁안임. 이러한 조치에 의해, 작년 여름의 참의원선거에서 최대 5.0배가 된 한 표의 격차는 최대 2.967배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함.
- 자민당은 6월 17일 제출한 개혁안은 오키나와 카나가와 등 4부현에서 의원정수 8석을 늘리고, 반대로 교토나 니가타 등 6부현에서 12의석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 4석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함. 비례대표는 선거구의 삭감율에 맞추어 2개 줄여 94석으로 하는 안과 정수를 1할 삭감해 78석으로 하는 두 안을 병기함.


싱가포르

싱가포르 해외통신원 : 김리라

싱가포르의 선거법 개정

(1) 개요

- 싱가포르에서는 2010년 『국회의원총선거법(Parliamentary Elections Acts)』 및 『대통령선거법(Presidential Elections Acts)』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보다 균형있는 선거제도(a more balanced electoral system)’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후 이를 위한 토론회에서 리셴룽 총리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내용을 제안함.
- 개정된 선거법은 2011 총선거(General Election)에 처음 적용되었음.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그룹대표선거구(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ies)의 축소, 지명의원(the Nominated Member of Parliament)제도의 정착, 비선거구의원(Non-Constituency Members of Parliament) 증가임.
- 그 외 선거법 개정 내용으로는 선거운동 휴지기(Cooling-Off Day) 도입, 선거 관련 인터넷 광고 법적기준 완화 등이 있음.

(2) 선거법 개정의 주요내용

- 그룹대표선거구(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ies)의 축소
 - 그룹대표선거구는 1988년 소수 인종 대표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같은 해 지역위원회법(Town Council Act)도 통과되어 그룹대표선거구 의원에게 지역 위원회를 운영하게 함.
 -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 소수 인종을 대표하는 3명의 그룹대표선거구 의원이 있었지만 그 수가 매 선거마다 늘어남. 이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룹대표선거구 집단이 되는 것을 우려한 리셴룽 총리는 그룹대표선거구 의원의 총수가 5명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림.
 - 대신 리셴룽 총리는 개인의원선거구(Single Member Constituencies)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2011년 총선에 선거구위원회(The Electoral Boundaries Review Committee)는 개인의원선거구를 12명까지 늘림.
- 지명의원(the Nominated Member of Parliament)제도 정착
 - 지명의원제도는 1990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회 밖에서 중요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 국회가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존경을 받으며, 예술, 문화, 과학, 산업, 사회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노동 분야에서 특출한’ 개인을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임.
 -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리셴룽 총리는 이를 제도화시키고, 지명의원들의 범위를 환경운동가,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new citizens), 청소년 활동가, 풀뿌리 운동가 등으로

-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2010년 법개정에 반영된 지명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a) 비즈니스와 산업(business and industry);
 - b) 전문가(the professions);
 - c) 노동운동(the labour movements);
 - d) 사회단체 및 커뮤니티조직(social and community organizations);
 - e) 언론·예술·스포츠 분야(media, arts and sports);
 - f) 고등교육기관(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 비선거구의원(Non-Constituency Members of Parliament) 증가.
 - 비선거구의원제도는 1984년 최소한의 야당의원들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선거에서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야당의원에게 국회의석을 주는 제도임.
 -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단지 비선거구의원수의 늘리는 것은 집권당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였음. 야당은 건전한 정치체계를 위해서는 이보다 그룹대표 선거구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야당 대표들의 의회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법 개정 관련 투표에서 개정 찬성으로 이 비선거구의원수의 수를 6명에서 9명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선거운동 휴지기(Cooling-Off Day) 도입
 - 투표일 전날을 선거운동 휴지기로 지정하여 선거 전날에는 면허가 있는 뉴스매체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 전날 격렬해진 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유권자에게 합리적으로 공약을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함.
-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선거운동 휴지기를 도입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 금지되는 다음의 사항을 선거운동 휴지기에도 금지함.
 - a) 정당의 상징이나 깃발, 배지를 전시, 착용, 사용하는 것
 - b) 선거 광고
 - c) 선거유세나 호별 방문
 - d) 전당대회를 여는 것
- 하지만 선거운동 휴지기에 인터넷 상에서나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SMS 전송과 같은 개인의사소통기기를 통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 전달은 가능함. 또한 등록이 되어있는 정당의 정치적 방송도 가능함.
- 선거 관련 인터넷 광고 법적기준 완화
 -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자만 인터넷 선거광고를 할 수 있는 규정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Media Development Authority)에서 발급한 허가를 받은 웹사이트 운영자라는 조건도 완화되면서 개인도 인터넷 선거 광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또한 개정된 법에는 후보자, 정당, 선거 관계자 등이 선거기간동안 새로운 미디어를 선거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광고 발행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positive list) 이 늘어남.